

문서번호	투자유치과-4244
결재일자	2014.5.15.
공개여부	비공개(5)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금융산업팀장	투자유치과장
반혜영	한병주	05/15 김정선

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 
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 업 비
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
#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

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 금융전문가 자문회의  
개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## 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4. 4. 22(화), 4.24(목), 4.30(목) 3회 개최
- 장 소 : 산업경제정책관실
- 참 석 : 우리시 3명, 외부 전문가 13명
  - 우리시 : 산업경제정책관, 투자유치과장, 금융산업팀장
  - 외부전문가
    - ▶(4.22) 한국금융연수원(정대용 교수), 숭실대학교(장범식 교수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(윤덕룡 박사), 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(이석재 대표), 싱가포르 개발은행(방효진 대표)
    - ▶(4.24) 한국금융연구원(김우진 박사),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(최석운 대표), 국제금융센터(이태봉 실장), 금융투자협회(곽병찬 부장)
    - ▶(4.30) 서강대학교(최운열 교수), 한국금융연구원(임진 박사), 메릴린치증권(김형진 지점장), 모간스탠리(고제연 전무)
- 자문내용 :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등

## □ 주요 의견

- 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
  -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대한 재정립, 목표 설정 후 단계적 추진

- 현재 시점의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전략에 대한 방향 재검토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, 단계적으로 추진이 바람직

○ 위안화 직거래 가능한 “위안화 역외거래소” 설립

- 중국의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여 자본시장 성장을 도모하면서 금융시장을 키워나가야함
-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데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매년 많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어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에 적합한 환경임
- 거액거래는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액거래를 중심으로 추진이 바람직(여행객 환전, 헤지상품 등)

○ 금융 인프라 지방이전 등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서울시차원의 문제제기 필요

-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금융관련 기관들의 지방이전은 홍콩, 싱가포르보다 부족한 경쟁력을 더 악화시키고 금융허브로의 발전 가능성과도 멀어지는 것으로,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할 필요 있음

○ 한국은 지역적으로 홍콩, 싱가포르 보다 비교우위에 위치해 금융허브 가능성 있으며, 금융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

- 일본은 자체적으로 부가 많으며 보수적이고, 상해는 외형은 자본주의이지만 근본은 공산주의라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
- 서울시 자체적 추진동력은 미약하나 타 금융허브 벤치마킹 등으로 중앙 정부에 적극적 제안, 건의하는 등 시 주도적으로 금융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

② “여의도 금융중심지” 활성화 방안(제도, 인센티브 등)

○ “ 금융중심지(금융특구)” 지정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필요

- 타 산업특구처럼 세금감면, 인센티브 제공 등이 금융중심지에도 적용 가능해야하며, 단순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의미가 없음

- 금융특구에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외화거래의 자유화, 금융규제 완화,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금융사 유치
- 금융위·금감원·서울시가 합동으로 정부의 규제 및 제도와 관련된 이슈들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 공동협의체 필요

○ 정부·공공기관 등의 판매대행사 또는 위탁운용사 선정시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 법인은 가산점 부여로 선정시 유리한 위치 확보

- 국공채 판매 대행사 및 연기금 등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법인이 있는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내법인 없는 외국계 금융사와는 차별화로 국내 진입 유도

○ “금융허브팀” 신설, 외국인 투자기관에 대한 One-Stop서비스

- IFC서울에 상주하여 외국계 금융사 및 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(교육, 의료, 비자, 인허가 등)

### ③ 금융인력 양성 필요성 및 MBA 설치 등 인력양성 방안

○ “대학원대학교” 설치로 금융인력양성

- IFC서울 입주 금융기관 종사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실무분야 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

○ 교육기관 신설보다는 고급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교육기관 지원 필요

- 다수의 해외유학과들로 고급인력 많아, 교육기관 신설은 불필요함
- 기존 금융교육기관 지원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필요

○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맞춰 기 교육기관과 연계 현장실무자 교육

#### ④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·마케팅 방안

- 타겟을 구체화하여 맞춤형 IR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 필요
- 대규모 해외 IR 개최보다는 1:1 미팅 또는 컨퍼런스(세미나) 개최가 효과적
  - 해외 IR 개최시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사 해외 직원 초청은 무의미하며, 결정권자와의 1:1미팅 또는 관련 협회들과의 세미나 개최가 효과적임
  - 금융 주요기관과의 컨퍼런스 개최로 금융중심지 서울 위상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
- 외국계 부동산 임대회사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한 외국계 금융사 진입 정보 확보
  - 신규 진입 및 이전시 외국계 부동산 임대회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므로, 외국계 부동산 임대회사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외국계 금융사 임대에 대한 정보 사전파악
  - 국내 진입 전 사전 준비로 들어와 있는 비즈니스센터 내 각 사무소를 대상으로 타겟마케팅 추진

#### ⑤ 기 타

- IFC서울 IT 인프라 강화
  - 금융사 특성상 비상시 back-up시스템 가동 등 전산망 안전지대를 필요로 하므로, IFC서울의 IT 안전성 확보 필요
- 외국계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을 직접 접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므로, 서울시에서 규제관련 건의 등 가교 역할
  - 외국계 금융사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밀감 형성 및 애로사항 등 관련 리스트 확보

## ○ 규제의 유연성과 일관성이 중요

-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의 많은 규제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,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규제에 신뢰성 확보 필요

## ○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인프라 환경구축은 지속적으로 개선

- 교육·의료·주거 등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 환경조성도 외국계 금융사 진입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

# □ 주요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의견

## ① 위안화 금융허브(직거래 등)

- ☞ 위안화 금융허브란 중국 본토 이외에서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 거래가 집중되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 집적지로서 무역결제에 위한 위안화 수요와 위안화 자금조달, 신용거래, 투자 및 헤지 모두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고
- ☞ 이 지역에서는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기능, 수요자의 위안화 조달 기능, 위안화 금융상품 운용시장이 구축되어야 하며,
- ☞ 중국과 협정을 통해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(중국계 은행의 국내지점), 위안화적격기관투자자(RMB QF II)한도, 한국에서 중국기업 등에 대한 위안화 표시 채권(K-RMB) 발행, 원-위안화 직거래 협정체결이 필요하므로
- ☞ **정부 차원에서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,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중에 있음**
- ※ 위안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별도의 거래소 설립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, 금융기관의 위안화 해외무역 결제업무, 위안화 소매금융서비스(예금 등), 위안화 대출 및 환전 등이 필요함

## ② “금융특구” 지정

- ☞ 금융중심지는 특구의 일종으로 특구 지정시 조세감면, 제도상 특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나, 여의도 금융중심지는 제도상 특혜가 없는 특구이므로

☞ 특구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함

### ③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BA 설치 등

☞ 금융전문인력 양성여부는 금융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금융산업 여건(은행의 지점 축소, 증권사 구조조정 등)상 필요성이 적음

☞ 다만,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수요가 많아 질 수 있는 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하므로

☞ 현재 금융위 주관 “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”(부산만 실시 중) 또는 우리시 자체 금융관련협회 위탁교육과정 운영 등 검토 추진이 필요함

### ④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이전관련

☞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기 확정되어 환원이 사실상 불가하므로

☞ 추후 공공기관 이전 논의시 적극 대응이 필요함

### ⑤ 대체거래소(ATS) 설치

☞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치가 가능하나,

☞ 전체 주식 거래량의 5% 이내, 5% 초과시 정식거래소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대비 수익성이 낮아 증권사들이 설립에 미온적이므로

☞ 증권업계 동향을 파악하여 대체거래소 설립시 SIFC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

### ⑥ “금융허브팀” 신설 - 외국인 투자기관에 대한 One-Stop서비스

☞ 외국계 금융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이용자가 적을 수 있으나,

☞ 외국계 금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IFC 내 글로벌센터에서 금융관련 서비스 제공

⑦ 국내진입 국공채 판매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

☞ 국공채 판매기업, 연기금 자산위탁 운용사 선정시 선정기준에 국내 법인 또는 지점 설치 외국계 금융사에 가점 또는 설립 의무화토록 관련기관과 MOU 체결 추진

⑧ “금융위원회” SIFC 유치

☞ 향후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시 SIFC 입주토록 추진

※ ‘12년도에 금융위원회를 유치 추진하였으나, 금융위의 퇴거 조건 (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전 가능)으로 무산

⑨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유치

☞ AIG와 협력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유치 추진

⑩ 외국계 부동산 임대회사를 통한 금융사 임대정보 수집

☞ 국내 진입 외국계 부동산 임대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계 금융사 임대정보 파악 및 여의도 금융중심지 유치 마케팅 추진

⑪ 대통령직속 추진위원회 구성

☞ 과거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러브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나,

☞ 현재의 정부정책(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해외 진출 등 - 금융중심지 정책은 후순위)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

## 향후계획

○ 금융중심지 조성기반 마련 추진계획 수립 : 2014. 6월

붙임 : 자문위원별 의견내용 1부. 끝.